“당대표 되면 전북발전에 기여할 터”

이종걸 “전북 발전 프로젝트들의 추진력 높여… 호남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만드는데 앞장 설 것”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7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전북의 훌륭한 선후배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당 대표 후보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 전북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당 대표 후보는 17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전북의 훌륭한 선후배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호남의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호남에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당원과 교감하는 일”이라며 “호남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절한 염원을 느낄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탁월한 전략적 선택을 했던 호남의 정치적 지혜를 존중한다”며 “호남의 정치적 지혜를 존중하고, 호남이 인정하며 호남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북 역시 발전 플랜은 많지만 무엇하나 분명하게 진전되는 것들이 없다. 당대표가 되면 전북의 훌륭한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 프로젝트들의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기금본부 이전과 금융타운 조성으로 연기금 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당의 최고 지도자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소신이 있어야만 제대로 담보 될 수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익산의 이춘석 의원을 도와 농식품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만들겠다. 또 비록 당은 다르지만 군산의 김관영 의원과 함께 새만금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만금복합리조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는 “새만금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된다. 또 강원랜드와 지역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카지노가 새만금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또 강원랜드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대표가 되면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를 맡기에는 부족한게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흙수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데 주목받는다. 다만, 이 대표를 지원한 근원이 친박이라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며 “뒤늦게 당대표 후보로 출발했지만 반전시켜 대선 승리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박재완, 전주지법 일일 명예실장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국민의당, 완주2)이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일일 명예민원실장으로 나섰다.

박의원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실에서 장석조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법원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명예민원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박의원은 “일일 명예민원실장으로서 법원을 방문한 도민들의 민원을 직접 대응해보니 조금이나마 법원 사무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특히 공공기관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명예민원실장 업무수행을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의정활동 역시 대 도민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민 입장에서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일일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법원의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법원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도당, 수서 고속철 전라선 증편 건의

새누리당 전희재 전주완산갑 당협위원장이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증편 운행을 중앙당에 긴급 건의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희재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라선 철도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장래 수요를 감안,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전라선 KTX가 현재보다 10회 이상 증편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철도공사 CEO 출신의 최연혜 최고위원은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라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우선 서울발 KTX부터 증편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당 대표와 최연혜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다. /신광영 기자

김상곤 “호남홀대론” 제기 추미애 “유언비어 생산” 비난

김상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7일 이른바 ‘호남홀대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광주 출신인 김 후보가 호남홀대론을 제기하며 호남지역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자 추 후보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대의원과 당원 분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지역을 놓고 선거전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일각에서 ‘호남 고립’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을 포기하고 3자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오만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내 주류인 친노무현·친문재인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전략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추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 “최근에 또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떤 분들은 선거판에 나왔다고 해서 유언비어를 막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남에 장차관을 기용하지 않았고 홀대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과 협력의 리더십 배워야”

더민주 도당, DJ 서거 7주기 논평… 박 대통령 회전문 인사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통합과 화합, 협력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17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동초 같은 의지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고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떠난 빈자리가 크게 와 닿는다”고 전했다.

전북도당은 또 “김 전 대통령은 13일간의 목숨 건 단신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리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정치, 경제, 복지,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뚜렷한 철학을 가졌던 지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6일 단행한 후반기 개각에서도 전북출신 장관이 배출되지 않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송로버섯을 먹으며 대탕평 통합의 인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내사람 챙기기 인사, 회전문 인사에 그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측근들을 2선으로 후퇴시키는 조치를 선언하는 등 과감한 인사탕평책을 실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여야, ‘서별관 청문회’ 증인 문제로 격돌

더민주 “실세 증인 채택해야 예결위 개최”… 새누리 “정치공세”

여야는 17일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정면 격돌하면서 국회 예결특위 등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들을 만나 예결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목표와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부실 사태가 있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예결위 개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김태년 간사도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며 “핵심 증인, 예를 들어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는 “추경 심사는 오늘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오늘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향후 소위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부 경제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할 경우, 추경안 심사도 불가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담판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더민주, 강령 전문 내 ‘노동자’ 삭제 포기

당내 일각 반발 고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부분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강령 전문 내 ‘노동자’ 문구 삭제 논란과 관련, 당권주자 등 당내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문구 삭제를 포기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결과 브리핑에서 “강령·정강정책 전문의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의 구절에 대한 당 강령정책분과 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내에 일부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비대위는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비대위는 강령 중 통일부분에서 삭제가 추진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한 부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전문에서 노동자를 삭제하고 강령 중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문구를 빼려고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종인 체제 하에서의 우클릭 내지 중도화 시도로 해석됐고 이에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별로 뭐 관심도 없다. 옛날에 있던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강령 개정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서도 “당이라는 게 과거에 집착해서는 미래로 갈 수가 없다”며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들어보니 전혀 그렇게 논의된 것이 아니고 그냥 문제된 것을 다 넣어서 끌내자고 해 10분 만에 끝냈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뉴시스

더민주 “우병우 특검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남은 것은 특검 밖에 없다”며 우 수석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이제 특별감찰도 무용해졌고 검찰도 수사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특정 언론에 누설해왔다는 정황이 모 방송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상대방이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우 수석 비호를 멈추고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특검 제안에 협조하고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정운천 의원, 국회 예결특위 추경소위 위원 내정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추경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다.

정운천 의원은 17일 새누리당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함께 예결위 추경소위 위원으로 내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결위 추경소위 위원을 내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추경소위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대책과 청년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19일과 20일 추경소위 심의를 갖고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추경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로 부의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 “국회가 최저임금에 관여해야”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최저임금 개정법안 14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법 개정의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며 국회가 최저임금에 직접 관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위해 국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최저임금은 인간이 목적인지 수단인지 즉,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에 살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결정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표결 끝에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했다. /신광영 기자

김관영,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 의원은 17일, 새만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미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4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광영 기자